북한에 퍼주기 약속했나? 방북 기업인 증인 신청 논란

올해도 망신주기 국감? 재계는 "10월이 싫어요"

증인 출석 기업인 역대 최다 전망

한진그룹·BMW·조선사 소환 예상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거쳐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던 '기업 총수 망신주기'식의 질의를 지양하기로 했지만 올해도 재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기업인 수가 역대 최다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의 보좌관이 올해 국감 증인 신청 기업인 명단을 외부에 흘리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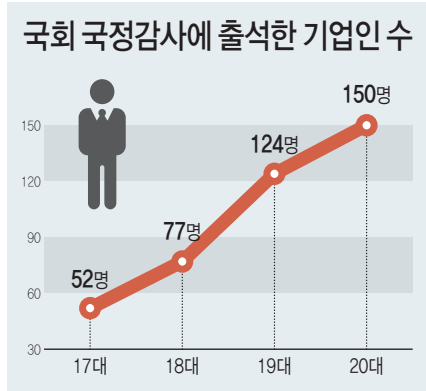
30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국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6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100여명이 넘는 재계 총수 및 관계자 출석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태에 답답해하고 있다. 대기업 회장뿐만 아니라 경영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경영인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이 또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도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불러놓고 고함을 지르거나 모욕을 준 바 있으며, 적절하지 않은 신문을 하는 등 공개 망신을 주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감에서는 ▲한진그룹 오너일가 등의 대기업 갑질 문제 ▲BMW 차량 화재 사고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들의 구조조정 문제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그룹의 경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줄줄이 불러들일 예정이다. 한 상임위의 증인 요청 명단 초안에는 이 같은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여야 합의가 남았지만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증인 출석 요청은 피하기 어렵다는 게 국회 안팎의 중론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차량 화재와 리콜 제도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국감 증인 출석이 유력하다. 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등에게도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주요 조선업체들은 모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조선 3사 대표이사들도 증인 출석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남북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는 데 기업인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일부 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증인석에 앉히겠다고 나섰다. 지난 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정상회담에 동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에 '퍼주기' 약속을 했는지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히 총수 망신주기식 감사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기업인들은 얼굴 낙인만 찍히고 답변할 기회는 제대로 얻지 못한 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이슈와 관련해서는 "기업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우려를 의식해 정무위원회가 예년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기업인 등 국감 증인신청 조건으로 3당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어느 의원이 증인신청했는지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업인 수는 지난 17대 52명을 시작으로 18대 77명, 19대 124명, 20대 150명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재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시장 불확실성 우려" 보완 촉구

혼란·부작용 있을 수 있어 개선 요구

형벌 규정 많아… 과감한 삭제 필요

28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규제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부작용 차단을 위한 '법안 손질'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28일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개정안 가운데 특히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 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5개 분야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 허위 고발이나 허위 자진신고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데다 공정위와 검찰이 기업을 이중 조사하거나 두 기관 간에 판단 차이가 생겨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발 남용에 대한 방지책과 중복 조사 금지, 기관 간 판단 차이 발생 시 조정 방법, 검찰의 수사 범위 등을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개정안에 기업 간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담합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상의는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을 유예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형벌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규제 조항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이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공익법인의 주식은 고유재산인 만큼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해 규율이 필요하더라도 공익활동을 저해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의결권 제한 도입보다는 공시 의무 강화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규제 사각지대를 겨냥한 규율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지주회사 제도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주회사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지주회사의 경우 다른 회사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성상 자회사 보유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부분 위반 행위에 형벌이 규정돼 있는 것을 일부 삭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많기 때문에 좀더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경쟁법에 형벌조항을 둔 나라는 14개에 불과하다"면서 "이 가운데 영국과 캐나다는 담합에 대해서만, 미국과 일본은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서만 각각 형벌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정비, 사건처리 절차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 등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기업들도 경제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며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디테일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박재근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지 모르나 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어진다"면서 "공정거래법도 과잉집행과 과소집행 사이에서 적정한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韓, 고용창출력 낮은 장치산업 의존도 높아

〉〉 1면 '韓美 실업률 역전…'서 계속

외환위기 여파로 한미 실업률이 역전된 1998년 1분기~2001년 1분기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실업률 역주행은 두드러진다. 올해 2분기 OECD 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5.3%로 1년 전보다 0.5%p나 떨어졌다. OECD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대 후반까지 치솟았지만 매년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의 OECD 간 실업률 격차는 1.5%p를 기록, OECD 실업률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가깝게 좁혀졌다.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2016년 이미 미국을 16년 만에 추월한 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의 15~24세 실업률은 10.7%로 미국(8.6%)보다 2%p나 더 높았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고용 훈풍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고용 창출력이 낮은 반도체·석유화학 등 장치산업 의존도가 커진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미·중 통상갈등,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 불안 등의 불확실성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고용에 추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좀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한국의 고용 사정이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운신의 폭을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과기부 "망중립성, 해결책 안될수도… 실증적 검증 필요"

〉〉 1면 '망중립성·제로레이팅…'서 계속

패스트레인은 '돈을 더 내는 사용자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차등'을 의미한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인터넷 기업 등장과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 발생으로 망중립성 완화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5G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관리형 서비스의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 주장했다.

김성환 교수는 부작용을 막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CP가 일정용량 점유시 ISP의 속도지연 허용 ▲중소CP에 한해 패스트레인 제공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므로 허용하되 사안별로 사후규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 논의가 망중립성이나 제로레이팅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5G 시대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을 것이란 의견에 따라 논의했다. 망중립 정책방향인 만큼 논의와 의제도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과기부측은 아직은 망중립성 등을 둘러싼 양쪽 주장이 그렇게 열띤 상태는 아니며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망중립성 등도 본격적 논의는 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망중립성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해결책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실증적이란 말대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과기부는 외국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외국 동향과 글로벌 기업 부분을 연계해 논의하겠지만 반드시 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 아니며 주장과 트렌트 등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과기부 관계자는 "5G시대가 도래했을 때 올 이슈를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조율하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 핵심은 국민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후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된 내용이 나온다면 좋지만, 없다면 비슷하게 찬반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고 분야별로 봐야될 주장이 통계나 수치적으로 입증되면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